

<토론 요지>

한양대학교 김지영

1. 한일 관계에 있어 아이덴티티의 중요성과 투트랙 (two-track) 접근에 대한 재고

-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구성주의 학파는 국가 이익 (national interests) 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아이덴티티에 근거해 국가 구성원들이 정의하는 것이라 봄
- 한일간 역사 문제 갈등이 한일간 정치, 안보, 경제 분야의 교류에 있어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정의해 옴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많은 학자 들이 주장해 왔던, 투트랙적 접근이 맞는 것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
- 한국이 역사 문제와 기타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외교를 추구해도 일본은 강력하게 ‘원 트랙’정책으로 일관하는 모습
- 현실적으로 한일 간 복합 갈등을 푸는 열쇠는 당연한 징용, 위안부 문제의 수습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2.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과 한일 관계의 상관관계?

- 일본내 이른바 ‘한국 피로감(Korea fatigue)’이 축적되어, 반한 감정이 한일 관계를 움직이는 강력한 변수로 등장
- 수출규제는 아베 정권이 일본 국내에 팽배한 반한 감정을 선거에 이용한 측면이 있음 (86% 일본국민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요미우리)/ 76.8% 강경대응 지지 (산케이))
- 스가 총리는 위안부 합의 실패로 인해 자민당 내부 비판을 감내해야 했음→일본 내 정치 상황 상 스가 총리가 한국과의 타협으로 보일 수 있는 결정엔 나서기 어렵다는 관측.
- 스가 내각 지지율은 코로나19에 대한 비효율적 대응 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출범 시점 대비 반토막으로 급락하며 역대 최저로 떨어짐.
- 한국 측이 사태 해결의 핵심으로 꼽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죄’나 한국에 유화적인 자세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전향적 입장 변화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음.

3.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는 한일 협력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 민주당 외교의 전통을 계승한 바이든 정부는 대북 공조 및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한 외교정책 방향으로 정함.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 등을 통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
-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의 최대 장애물인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한국과 일본에 구체적인 외교적 압박 가할 가능성 있음
-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이 일본에 기울고 있다는 평가.
-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는 간부에 오바마 정부를 지지한 직원을 많이 기용 예)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유도한 인물이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
- 바이든 행정부가 개입하거나 중재를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의 충고를 듣고 위안부 합의에 응했는데, 결국 새로운 한국 정부에 의해 합의가 사실상 부정당했으니 순순히 미국 말만 듣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한국의 대응은?